

아시아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과 핵 보유 유혹

동아시아재단

사회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장관/ APLN 명예의장
발표	첸동샤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원장 스즈키 다쓰지로 나가사키대학교 교수/ 핵무기폐기연구센터 원장 G.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정리	민인영 서던캘리포니아대학 박사과정

첸동샤오

동북아 국가들이 안보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핵무장에 대한 유혹에 넘어간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안보 환경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 이는 북한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음. 핵무장은 또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오판의 가능성 등으로 오히려 심각한 불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큼. 중국의 핵 전략은 오랫동안 기본적으로 최소 억지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았음. 중국 핵 전략의 목표는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 중국은 향후 역내 안보를 위해 가교(예를 들어 북한 및 한미 간) 또는 역내 안보 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G. 존 아이켄베리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안보 상황은 지난 수십년간의 헤게모니 중심에서 세력 균형으로 진행 중. 역내 국가들의 급속한 국방비 증가는 역내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 미국과 중국의 안보경쟁은 향후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큰데 두 국가가 현재 핵

무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더 큼. 중국은 과거의 최소 억지 전략에서 벗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을 확충하고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는 등 공격적 핵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 또한 대탄도미사일(ABM)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행태는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음. 결국 서로가 상대방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핵전력을 확장하는 안보의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됨.

스즈키 다쓰지로

일본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론의 대세는 핵무장을 강하게 반대함. 일본 대중의 강한 평화주의 성향 때문에 만약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약화된다 할지라도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함.

송민순

북한의 계속된 핵개발 시도를 방관할 수 없는 한



가렛 에반스

첸동샤오

스즈키 다쓰지로

G. 존 아이켄베리

송민순

국에서는 이제까지의 안보 전략에서 벗어나 대안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음. 자체적인 핵무장에 대한 대중적 논의도 더 이상은 금기시되지 않음.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무기 없는 세계와 아시아 비핵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음. 미국은 중국에게 공을 떠넘기려 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 붕괴에 대한 두려움 등 나름대로의 전략적 계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Keywords

핵무장, 핵전략, 핵우산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역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부 트랙2 방식의 '나가사키 프로세스'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동북아 비핵화 지대 구축을 궁극적 목표로 핵 보유 3개국인 미국·중국·러시아가 핵 미보유 3개국인 일본·남한·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주는 비핵화 지대 조약을 맺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일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당량의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플루토늄 보유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 때까지 재처리 유보를 선언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동북아시아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자적 기구의 창설을 고려해볼 수 있음. 남미의 핵물질 관리와 통제를 위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협력기구(ABACC)를 참고할 수 있음.
- 현존하는 트랙2나 트랙1.5 대화에 더해 미국과 중국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 트랙1 대화를 시작할 필요성이 절실함. 양국이 서로 인지하는 안보적 취약함을 인정하고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도출해내야 할 필요가 있음. 미국과 소련이 맺은 핵협정을 제한적이거나 모델로 생각해볼 수 있음. 여기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상호 취약성'인데 레이건과 고르바초프는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에서 탈피해 핵무기에 의해 동일하게 위협받는 동반자적 정신으로 역사적인 협정을 이끌어냈

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함. 공식 정부 간 대화에서 핵무기 정책을 다룬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대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 북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봉쇄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함. 봉쇄정책은 매 파적인 정책이 아니라 전쟁을 피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임.

• 현실성을 고려할 때 군사적인 방법보다는 외교적 수단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안임. 한반도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잘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 양국은 북한 핵문제가 계속 악화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비핵화 지대 아이디어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북미 간 관계 정상화 등 여러 가지 기타 조건이 있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집증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북한이 먼저 양보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됨. 주변 국가들이 먼저 북한에게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해야 함.

•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은 생각보다 제한적임. 과거에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핵개발이 북한의 안보 이익에 역행한다고 설득했지만 북한은 움직이지 않음. 중국에게만 공을 떠넘긴다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은 기대하기 힘들.